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7월 1차 (2020.7.1~7.16)



주요 현안



고용노동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최초로 “고용노동부-산하 공공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를 개최해 성희롱, 성차별 없애기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 공유 등 조직 내 성평등 문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 마련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1.]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29

일·생활 균형 위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1,492개소(50.1%)에 도입

☑ 고용노동부는 2020년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조사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개소(50.1%) 라고 설명하며, 일·생활 균형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2.]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33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지원 연말까지 연장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6.]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3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7.]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5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실시

-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07.]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44>

국가인권위원회, 고질적 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과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적 책무 강조

- ☑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15.]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73>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가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 동의를 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및 관련 피진정인들에게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08.]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47>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안전한 돌봄체계,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 조성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함.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관련 조사결과, 학교와 유치원 등 온라인 개학에 따른 돌봄 공백과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안전한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취약 가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늘어난 가사와 돌봄을 주로 여성이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0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18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정책운영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 2020년 말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진행

- 코로나19가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결혼·임신을 미루고 저출산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청년에 대한 고용 충격, 돌봄의 어려움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교육, 주거, 일자리 등 끊임없는 경쟁에 몰린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 강조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7.0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5338

공공부문 채용공고 등에 모 · 부성 보호제도 안내 권고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① 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③ 청년창업지원사업, ④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0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19

최근 범죄인인도 불허결정에 따른 법무부의 후속조치

☑ 법무부는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내린 ‘인도불허’결정에 대하여, 아동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하였다고 밝힘.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7.09.]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lT1NjA2JTJGYXJOY2xWVV3LmRvJTNGcGFzc3dvcmQlMQ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12cmdzRW5kZGVtdHlIMQlMjZpc1ZpZXdnYW5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QQlMjZzcmNoQ29sdW1uJTNEJT12c3JjaFdyZCUzRCUyNg%3D%3D>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에 대한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함.

- 현재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내려진 외출 자제나 이동제한 조치들로 인해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여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이 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상담 증가 추이는 없지만 피해 및 상담·신고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 요구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1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25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입장

☑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힘.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1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24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 긴급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장 등 공공기관 내 발생한 사건 관련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긴급회의 개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1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30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06-30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

가족·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2020-07-01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 종료까지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민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아동보호 절차를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의 시설 입·퇴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원가정과의 분리 및 가정복귀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 결격사유를 규정함과 더불어 아동복지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20-07-02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맞벌이 부부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급휴가제도로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는 가계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안 제22조의2제2항 후단 신설 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2020-07-02	현행법에서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가정환경만이 아동에게 필요한 안정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표현들은 자칫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호자나 친권자에게 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형편의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이념과 책무에 가정이나 가정복귀에 대하여 명시한 부분을 바꾸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가정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지도 병행(안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2인)	2020-07-02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증명서 요구 시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금지의 실효성 확보(안 제46조, 안 제57조제2항 및 안 제122조)

가족·돌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2020-07-02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 강화 및 한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3제4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2020-07-03	현행법에서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원가정 보호 원칙”의 내용을 개정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25인)	2020-07-06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제3호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07-06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2020-07-0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시·군·구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가정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안 45조제2항 및 제57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2020-07-08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 제고(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27인)	2020-07-08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함. 한편,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반자동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또한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신설(안 제5조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2020-07-09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할 때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군·구 통합 설치·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53조의2,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가족·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2020-07-09	철저한 아동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담 보호조치 처분을 포함한 각 보호조치 처분이 종료된 후 진행할 사후조치의 최저 기간과 최저 현장 점검 횟수를 정하여 강력하고 밀접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특히 원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복귀 여부 판단을 도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조제1항·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71조의2 신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2020-07-09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 제고(안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0-07-10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제9조제1호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0-07-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및 일시적 운영중단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2020-07-15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안 제27조제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2020-07-15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271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2020-07-16	사업주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청구한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안 제22조의5 신설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2020-07-16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일·생활 균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2020-07-06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감소 방지와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안 제51조의2 신설 등)

일·생활 균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2020- 07-06	출산전후휴가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이 달력 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5항).
여성 노동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2020- 07-02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30%까지 여성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도움(안 제10조제3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4인)	2020- 07-02	현행법처럼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및 활동주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시의성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안 제4조제1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5인)	2020- 07-0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강화(안 제19조의2 신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07-07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안 제15조의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2020- 07-08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 고과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화(안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5항 및 제37조제2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0- 07-1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도모(안 제5조 및 제7조 등)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2020- 07-14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함께 성비·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 도모(안 제15조의6)
법·계획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2020- 07-03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 유대와는 별개로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진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어, 가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상속권 박탈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현행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결격 여부를 따지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이에 별도의 상속권 상실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상속제도가 가진 문제점 보완 및 개선(안 제1004조의2 등)

건강· 재생산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29인)	2020- 07-0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임신부의 출산환경 개선(안 제10조의6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3인)	2020- 07-06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난임치료 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한편, 난임치료를 위한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권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및 제39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2020- 07-06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으로 초기에 해당하여 유산의 위험이 큰 12주 이전과 후기에 해당하여 조산의 위험이 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 보장(안 제74조제7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2020- 07-0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정한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 지원 이외에 치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의6 신설)
젠더 폭력· 안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06-30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범죄에 성폭력 범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운용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초본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2020- 07-02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동·청소년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180조의2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9인)	2020- 07-02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함.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안 제8조 및 제36조제1항)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2020- 07-0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불법촬영물 및 그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명시(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4인)	2020- 07-03	구체적인 행위를 스톱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스톱킹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신변안전 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톱킹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안 제1조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2020- 07-03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교육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07-06	많은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톱킹범죄 신고를 하기 어렵거나 신고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며, 가족 등 주변인까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스톱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07-06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안 제13조제3항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07-07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07-07	아동학대의 정의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07-07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안 제23조 제1항 단서)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2020- 07-08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에 처함(안 제50조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2020- 07-08	아동학대범죄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일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 보다 가중하여 처벌(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2020- 07-09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 강화(안 제5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2020- 07-09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처분을 포함한 각 보호조치 처분이 종료된 후 진행할 사후조치의 최저 기간과 최저 현장 점검 횟수를 정하여 강력하고 밀접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원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복귀 여부 판단을 도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조제1항·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71조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의원 등 23인)	2020- 07-09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긴급 임시 조치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함. 범죄가 아닌 현장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출입·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 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 강화(안 제11조제2항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의원 등 23인)	2020- 07-09	일정한 행위를 스톱킹 범죄로 정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 발생 이전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경찰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 결정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여 스톱킹 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2020- 07-09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 강화(안 제5조)

젠더 폭력· 안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의원 등 23인)	2020- 07-09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가 가능하게 하며 긴급임시 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위해 처벌을 강화함. 또한 범죄가 아닌 현장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출입·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조치 접근금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나 직장 등과 같은 일정 공간으로 부터의 일정 거리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며,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 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 강화(안 제11조제2항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의원 등 23인)	2020- 07-09	일정한 행위를 스톱킹범죄로 정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 발생 이전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며,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안 제1조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2020- 07-09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61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2020- 07-1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0- 07-13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방지(안 제23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9인)	2020- 07-1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도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위탁실시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의원 등 23인)	2020- 07-13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취지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 사건 중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변경하고, 사법 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익 제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8인)	2020- 07-14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 등의 유포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자의 행위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물론 사회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행위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안 제23조의2 신설)

젠더 폭력· 안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2020- 07-14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해당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체교육을 장려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안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5항 및 제39조제3항제1호 신설)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2020- 07-14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 안전을 보호(안 제1조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2020- 07-14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을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 하게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2020- 07-14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벌 근거를 마련(안 제5조의14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2020- 07-16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복귀를 결정하고, 아동 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 강화(안 제16조제3항 및 제29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2020- 07-16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형량 하한을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학대 등에 따른 처벌을 강화(안 제4조, 제5조, 제61조의2 신설 및 제63조제1항제1호 삭제)
저출산· 고령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0인)	2020- 07-1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2020- 07-0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 개선·보완(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제2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7.1	한국일보	방과후학교 강사 평균 월소득 2만7000원 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10930000301?did=NA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정책세미나]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7.1	여성신문	[조주빈 검거 100일] 'N번방 법'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못 막는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dxno=200407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성평등현안조사	7.3	오마이뉴스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26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7.6	문화일보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601070221336001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7.9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불안에 긴급돌봄서비스 이용률 저조... "대책 시급"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78000530?input=1195m
	7.9	뉴시스	코로나 이후 37.4% 가족간 갈등 경험...배우자와 마찰 60% 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9_0001089175&clD=10201&plD=10200
	7.9	뉴시스	맞벌이 미취학 아동, 평균 2시간46분 '나홀로 집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9_0001089355&clD=10201&plD=10200
	7.9	서울경제	여가부, 코로나19 이후 가족 정책 토론회 개최	https://www.seaily.com/NewsView/125815K7XJ
	7.9	쿠키뉴스	여가부, 안전한 돌봄체계 조성 위한 정책과제 토론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090161
	7.9	한국일보	코로나19 후 맞벌이 초등생 자녀 4시간45분 홀로 보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909360003273?did=NA
	7.10	EBS	맞벌이 가정, 자녀 어릴수록 '돌봄 공백' 심각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317027/N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7.13	YTN	조수진 교수 "성인지 감수성 결여, 체계적인 훈련과 실질적인 규제 필요"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31559509920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7.15	머니투데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폭력 상담도 비대면으로"...여가부, 릴레이 토론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510085589545
	7.15	연합뉴스	여가부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 대응방안' 토론회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076200530?input=1195m
	7.15	뉴시스	코로나19, 가정폭력 '사각지대' 위험...여가부, 16일 대책 토론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15_0001095907&clD=10201&plD=10200
	7.15	아시아투데이	코로나19로 가정폭력 증가 가능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715010008848
	7.15	한국일보	코로나 이후... 전세계 가정폭력 대부분 늘었는데 한국만 감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509400002631?did=NA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7.15	쿠기뉴스	여가부, 코로나19 팬데믹 속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 점검 나서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150169
	7.16	여성신문	"지금 남편이 재택근무 중이어서요" 코로나19에 고립된 가정폭력 피해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61
중·고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연구	7.16	한겨레	중고생 3% "학교서 불법촬영·유포 피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3863.html
	7.16	뉴스1	중고생 3% 학교서 불법촬영·유포 피해…25%는 성희롱 경험	https://www.news1.kr/articles/?3997398
	7.16	한국일보	중고생 3% "불법 촬영물 피해봤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610120005126?did=NA
	7.16	경향신문	'학교서 불법촬영 피해 경험' 3%…알고도 참거나 그냥 넘어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61052001&code=940100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7.1	아시아투데이	"조직문화 개선이 성희롱·성차별 없애는 근본대책"	장윤선 부연구위원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701010000639
7.3	이데일리	[폭력에 멎든 스포츠]① 최 선수 5곳에 SOS 했지만 방관… 대통령 호통에 부랴부랴 실태 파악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5686625830912&mediaCodeNo=258
7.4	여성신문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최소 2개월 기다려야 "법 사각지대"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73
7.6	내일신문	"데이트폭력, 드러나지 않은 범죄 더 많을 것"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4808
7.6	서울신문	미국 송환 피한 손정우…여성계는 '#사법부도_공범' 해시태그 운동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6500086&wlog_tag3=naver
7.6	BBC	최숙현: 매맞는 선수들...체육계 폭력 되풀이되는 이유는?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www.bbc.com/korean/news-53306080?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7.7	연합뉴스	"전태일 열사 50주기…여성 노조원 비율 1970년보다 하락"	김난주 부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155900530?input=1195m
7.7	중앙일보	해외선 일반화한 콘돔 교육인데 성범죄 부추긴다고?...달레마 빠진 학교 성교육	조영주 부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819444
7.9	서울신문	선수 폭행했는데 "성실한 교육자"라며 정상 참작하는 법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9500142&wlog_tag3=naver
7.9	서울신문	"성과 낸 지도자라서"... 하키 채로 수차례 때려도 관대한 법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10010026&wlog_tag3=naver
7.12	중앙일보	"노메이크업 출근, 신기" 코로나가 여성들 일상도 바꿨다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822520
7.13	연합뉴스	학교 화장실 '물카' 교사 잇단 적발...교육부 담당은 5개월째 공석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0137800530?input=1195m
7.13	SBS	학교 화장실 '물카' 교사 잇단 적발...교육부 담당은 5개월째 공석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80155&plink=ORI&cooper=NAVER
7.13	MBN	학교 화장실 '물카' 교사들 잇따라 적발...교육부 담당은 5개월째 공석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www.mbn.co.kr/news/society/4214091
7.13	여성신문	[여성논단] 고 최숙현 선수 폭력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졌다면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14

7.14	조선일보	학교 불법촬영 있는데... 교육부 담당은 빈자리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017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7.14	메디컬투데이	성별임금격차 OECD 37개국 중 최하위...“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해야”	김난주 부연구위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2987
7.14	중앙일보	“왜 4년 지난 지금?”...미투 피해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824653
7.15	연합뉴스 TV	성희롱 대응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유는?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715023700641?did=1825m
7.16	노컷뉴스	위험한 “왜 뒤늦게”...즉각대처 어려운 ‘권력형 성범죄’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379438
7.16	중앙일보	왜 우리는 바나나로 성교육을 하게 된 걸까?	조영주 부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826742

유관기관 연구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돌봄, 장기요양 등에 대한 대응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봄.

참고자료

- [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제13호, 2020.06.]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list.do?menuId=53&tid=38&bid=991>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외 디지털 성폭력 및 성평등 교육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의 온라인 문화를 진단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방향성을 모색함.

참고자료

- [2020년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자료집, 2020.07.09.]
<https://www.kigepe.or.kr/use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MSTR.0000000000050&nttId=4673&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authFlag=N&pageIdx=1&menuNo=14100&pageUnit=10&searchCI1DetailCodeArr=&searchCI2DetailCodeArr=&searchBgnde=&searchEndDe=&searchCnd=0&searchWrd=>